"日, 독도문제 현상아닌 뿌리를 보라"

潘외교-시오자키 부대신 면담

카타르ACD 외교장관 회담 제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오른쪽)이 1일 오후 반기문 외교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외무성 부대신을 만나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은 현상만 보면 안되며 그 아래 깔린 뿌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시오자키 부대신을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측이 독도 문제의 배경에 있는 역사적 연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 장관은 "한일 양국간에 국교 정상화가 된 지 수십년이 됐는데도 과거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시오자키 부대신은 "일본측으로서도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관련해 한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돼 있으며 따라서 한일 양국이 서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23~2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협력대화(ACD)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 좋은 의사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은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오자키 부대신은 납북된 요코다 메구미 사건과 관련해 한일 양국간 공통의 현안인 만큼 서로 잘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반 장관은 현재 대검에서 조사중인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일본측에 통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과 시오자키 부대신의 면담은 이날 오후 5시부터 50분가량 진행됐다.

2일 귀국할 시오자키 부대신은 방한 기간에 여야 대표를 만나려 했으나 불발됐으며 대신 임채정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을 국회에서 면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통일부- 레프코위츠 美 대북인권특사 거듭된 설전 배경은

'네오콘' 美 대북강경책 견제

美 국무부도 '레프코위츠 조율되지 않은 발언' 문제 제기

통일부와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 간 설전이 2라운드로 이어지면서 공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설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는 한미 정부 간 마찰이라기 보다는 통일부와 레프코위츠 특사 사이의 공방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이른바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와 미국 내 강경파인 네오콘 간의 공방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1라운드는 3월 30일 한 토론회에서 나온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른바 '2달러' 발언 때문에, 2라운드는 4월 28일 그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 때문에 불거졌다.

그의 토론회 발언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인권 문제에 결부시킨 반면 기고문은 개성공단은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문제삼아 논점을 넓혔다.

그 때마다 정부에서 반격에 나선 것은 통일부였고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 수위 에 맞춰 대응의 강도는 더 세졌다. 1라운드에서는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이 '사실 왜곡'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번에는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 태도"라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과 "내정간섭적 발언"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강한 반응까지 나온 것이다.

이렇듯 통일부가 공격의 '선봉'에 서 있고 대응 강도까지 높인 배경은 뭘까. 여기에는 개성공단이 대북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이 미 행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각각 감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철도, 도로연결과 함께 3대 경협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적 긴장이 가장 심했던 지역에 군이 빠지고 조성된 지리적 위치 뿐 아니라 북측에게 시장경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경제-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모델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물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겨냥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와 지역별로 임금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결정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레프코위츠 특사의 '튀는 목소리'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실제 부시 행정부는 명시적으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17일 경주에서 나온 한미 정상의 공동선언에도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화해의 진전에 따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영토주권 수호는 국정의 최우선"

우리당 정동영 의장 독도 방문 '독도수호 3원칙' 천명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일 헬기편으로 독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당 의장 선출 직후부터 '역사와의 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그의 독도 방문은 기상 문제로 4차례나 무산됐다가 5번째 도전만에 실현됐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기 위한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날 독도 방문에서 정 의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던졌다. 정 의장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일본의 처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고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후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인 동시에 역사문제 ▲독도는 역사 이래 대한민국의 영토 ▲영토주권의 수호는 대한민국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는 '독도수호 3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우리는 우리땅 독도에 대한 분쟁화 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을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독도에 도착해 경비대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들의 노고를 위문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해경 함정을 타고 독도 인근 해역을 둘러보며 일본측 동향과 우리 경비태세를 점검한 뒤 울릉도로 이동해 해경.해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우리당 조배숙 최고위원과 정청래 유기홍 이종걸 의원,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차녀 홍연숙씨, 류병태 독도의용수비대협의회장, 김구 선생의 손자 김휘 씨 등이 함께 했다. /연합뉴스

"한국 독도문제 강경대응 참고할만"

中 고위관리 언급

중국이 일본의 동해도발과 한일 외교당국의 타협과정,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및 그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 고위관리가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강경 자세는 중국에도 참고가 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중국 언론도 노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이후 뉴스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의 형식으로 독도문제 관련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의 동해도발 의도, 역사인식 문제, 동북아시아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쑨즈후이(孫志輝)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달 28일 중국과학원에서 열린 '해양의 전략적 지위와 중국 해양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중국이 관할할 수 있는 해역 300만㎢ 가운데 52%는 이웃나라와 쟁의중이라고 밝혔다.

쑨 국장은 이어 중국과 일본 간의 동중국해 경계획정 문제에 언급, "한국이 독도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준 것은 중국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쑨 국장은 이어 "중국은 해상에서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만부득이할 때는 해상에서 일본에 맞서 대항할 능력과 결심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바탕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이론지 광명일보의 자매지인 신경보는 지난달 30일 '독도분쟁에서 나타난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시각을 전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日, 한반도 감시위성 7월 또 발사

올해안 총4기 체제로 운영 계획

일본 정부는 한반도 감시용 정찰위성 1기를 7월에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올해안에 한반도 감시용 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쏘아 올려 현재 운용중인 1호기 2기와 함께 4기 체제로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으로 구성되는 정찰위성은 2기 1조로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12월 자체개발한 H2A로켓으로 2호기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하는 바람에 발사가 미뤄졌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당시 3, 4호기를 탑재한 로켓이 궤도를 벗어나자 위성을 폭파했다.

이때 위성 2기를 한꺼번에 잃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광학위성인 3호기를 먼저 발사한 후 내년 2월이나 3월께 레이더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운용중인 1호기는 이틀에 한번 지상을 촬영하고 있으나 2호기 2기가 가세해 4기체제가 되면 전세계 모든 지점의 촬영 주기를 하루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을 발사하자 독자적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며 그 해말 각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정찰위성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광학위성과 야간, 우천시에도 전파로 화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레이더위성으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군사시설 감시와 재해상황 파악 등이 임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3, 4호기 발사와 병행해 해상도를 높인 차세대 위성을 개발, 1호기 2기를 대체할 개량형 광학위성을 2009년, 개량형 레이더 위성은 2011년에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